

호남권 4개 시·도의회 의원들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한 뜻'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
국가발전의 밑거름”
전북·광주·전남·제주
광역의원들, 결의대회 가져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원들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원들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호남권 광역의원 등은 이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30여년, 농촌과 공장지역이 다르게 변했고 섬과 내륙도 시가 전혀 다른 조건을 갖게 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30년 전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고 가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흥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 사람살이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략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 주민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지방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보장 및 자치 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지역 케나프 실증사업단지 조속 확보를”

나기학 도의원, 농기원 케나프 재배 현장 방문

새만금 간척지에 미래형 친환경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케나프 실증사업 단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양질의 사료작물인 케나프 재배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새만금 간척지 내 시험포장을 직접 둘러봤다.

나 의원에 따르면 케나프는 에너지 작물로서의 가치가 높아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급부상한 작물로서 전북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케나프 적응시험을 통해 도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케나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케나프의 미세먼지(N₂) 흡수율은 옥수수의 66배에 이르고 온실가스(CO₂) 흡수율은



일본 삼나무의 7배에 달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새만금 간척지에 케나프를 재배함으로써 거의 전량 수입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대체도 가능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므로 새만금 케나프 실증사업 단지는 조속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동맹 더 강화될 것”

“한미 NSC 지소미아 문제로 7~8월에만 9번 유선 협의
日 반응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하다는 점 설명”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민)은 지난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구체적으로 “백악관 NSC와 실시간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 방문 시에도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했다”며 “한미 양국 NSC간 이 문제로 7~8월만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실망감은 이러한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기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차장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다”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 수집, 판도 분석,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면 그만큼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높아질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백악관 가서 상대방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정상 간 통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미간관계는 북핵 문제와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그런 대화가 실무차 차원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우려도 불식시켰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중국적으론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앞장 공로

송성환 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총효대상 수상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한국을 빛낸 2019 대한민국 총효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총효대상 시상식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송 의장은 지방정치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로 정치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제11대 전북도의회를 이끌며,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이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

섰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 촉구활동을 주도했다.

또,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의 시도의회와 연대

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활동도 왕성하게 벌였다. /김진성 기자

정의당-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대책 토론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공동 주최로 최근 국회 분청에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과 임광대 오경재 교수는 지방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보장 및 자치 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가 있다고 정리한 것은 현재에는 노출 정도가 안 나왔지만 과거에는 노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해 준 것이다.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환경 피해 구제 신청 및 인과관계 성립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규제예산과 익산시의 예산을 통해 앞으로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의결 제시에 대한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소통 부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 보고서도 주민들과 협의해 작성 하고, 주민 입장을 고려, 전향적인 해석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TF 구성 등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현 기자

제13회
공소젓갈 발효축제

2019. 10. 3.(목) ~ 10. 5.(토)
부안군 진서면 공소다용도 부지 일원

추천: 공소젓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부안군 후원: 부안수원, 남부농협, 공소젓갈협회